

전북도-BNP파리바 맞손 신재생·AI '물꼬'

국내 첫 지자체 협약투자동력 기대
신재생·K컬처·바이오소부장
AI 등 5대 미래산업 분야 공조
전북 인허가 지원·파리바 금융 지원



전북도-BNP파리바 업무협약
새만금 신산업 '날개'

28일 서울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도와 BNP파리바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도로테 레가조니 BNP파리바 한국대표가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가 글로벌 금융그룹 BNP파리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28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BNP파리바와 도내 인프라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NP파리바가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택받은 지자체라는 의미도 있다.

BNP파리바는 1848년 국립 파리은행으로 시작, 2000년 민영화를 거치며 민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재편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재정 투자자 역할을 해왔다. 국내에는 1976년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번 전북과의 협약이 국내 지자체와의 첫 공식 협력에 해당한다.

이날 협약식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BNP파리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협약 체결 이후 협력 방안과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북의 5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금융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K-Culture 산업 인프라 조성 ▲바이오 소부장산업 ▲첨단 AI 모델리터 및 퍼지컬AI산업 ▲디지털금융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전담한다. BNP파리바는 각 분야 추진 사업의 파이낸싱 제공과 주관을 맡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유람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그룹과의 이번 협력은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NP파리바는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인프라와 ESG,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내에서만 40여 개 이상의 태양광 프로젝트(1.6GW)에 투자한 바 있으며, 수소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어서 전북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력의 범위는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AI 모델리터,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금융 자본과 투자 연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프로젝트의 설계·개발·시행 전 과정에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미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산업 구조 고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를 지속 확대하고 전북의 산업·인프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내 주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국립생태원, '녹조를 사료로' 토하 친환경 양식 특허 3건 출원

무해 녹조류 배양 사료 활용
비용 절감·수질 개선 기대
김제·부안 44어가 실증 완료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 기술 특허 3건을 공동 출원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 및 생산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방법 ▲새뱅이를 활용한 부영양화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생식물 복원방법 등 3건이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해 녹조류를 직접 배양해 토하 사료로 활용하는 양식 기술이다. 시판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아 녹조 배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하가 녹조를 먹는 특성으로 인해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점에서 기존 양식기술과 차별화된다.

기존에 도가 보유한 새뱅이 관련 특허 4건은 특정 품종을 선별하고 시판 배합사료를 사용하면서도 양식장 물을

자주 갈지 않아도 되는 기술(무환수 양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이번 기술은 사료 자체를 녹조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양식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 출원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 관련 특허 등록 및 출원 총 7건을 확보하게 됐다.

전국 최초로 토하 양식기술을 확립한 데 이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어업 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도는 2023년부터 김제시와 부안군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토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기술도 참여 어업인 현장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국립군산대학교가 참여하는 '농업 부산물 사료화' 연구과제도 추진해, 향후 토하 양식산업을 배합사료를 최소화한 친환경 양식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AI로 다크팩토리 키워 수출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서 정동영·최형두 공동주최
AI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개최
삼성SDS "AI 풀스택 필수" 강조

정동영 통일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시준(중)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28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삼성SDS 부사장은 "미래의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에이전틱 AI는 미리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다. 반복적인 업무 처리

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한다.

하지만 미래 에이전틱 AI는 AI가 업무의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으로, 사용하는 정책 결정과 결과 피드백 역할만 수행한다.

김 부사장은 "미래의 에이전틱 AI는 'AI 풀스택'이 필수적이다"며 "AI 풀스택은 인프라부터 플랫폼, 솔루션까지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인프라는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를 뜻한다.

삼성SDS는 고가용성, 고보안이 보장된 공공기관 및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인 'Samsung Cloud Platform(SCP)'을 보유하고 있다. SCP는 대규모 GPU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AI 특화 인프라를 제공한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 퍼지컬AI 확장사업 발굴...로봇산업 육성 모색

전문가회의서 확장사업 과제 도출
앵커기업 협업·인센티브 전략

전북도는 28일 퍼지컬AI 확장사업 발굴과 로봇 산업육성, 관련 앵커 기업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퍼지컬AI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이 퍼지컬AI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사업을 논의하고 퍼지컬AI와 연계한 로봇산업 육성 전략, 앵커기업과 지역 기업 간 협업 구

조 마련, 인센티브 기반 투자 유치 등 기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전북 로봇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앵커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조건과 지원정책 등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실행 중심의 퍼지컬AI 확장사업 목록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논의의 기반이 되는 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실 환경에서 작동하는 협업지능 기반 퍼지컬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물류 산업의 AX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실제 제조 현장을 반영한 테스트베드와 개방형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 실증부터 검증, 인증, 확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퍼지컬AI 확장사업 발굴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퍼지컬AI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으로 3회에 걸쳐 퍼지컬AI 전문가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산하에 '퍼지컬AI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연구원 2026년 '전면 혁신' 도정 싱크탱크 재정비

연구 기반 혁신·현장성 강화 초점 성과·보상 연계 강화 몰입도 제고 AI·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구축 도민 참여 개방형 연구원 고도화

전북연구원은 2026년을 기점으로 연구 기반과 정책 수행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전북연구원 혁신안을 마련,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혁신안은 ▲연구 기반 및 연구역량 혁신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및 도정 연구 확대 ▲도민·시군·도의회와 합

계하는 연구원 운영을 3대 전략 축으로, 연구의 현장성·시의성·정책 반영성을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중심 조직으로의 재편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팀·센터 최소화 등을 통한 슬림한 조직 운영으로 연구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해 실적평가급 지급 기준을 성과 중심으로 강화하여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인구, 경제 등 도정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형 정책 DB'를 구축해 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

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AI·현장 중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저연차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우수 연구과제 포상제를 신설하고, AI·데이터 기반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 문해 교육을 정례화한다.

특히 시군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국가 예산 및 도정 과제로 연계하는 현장리서치 TF를 운영해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정 반영률 높이는 정책 연구 체계 구축하기 위해 도정 연구 확대를 위해 정책·현안과제를 기존 48건에서

7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 실국과의 분기별 정책협의 정례화를 통해 선제적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중간 결과 협의 의무화를 도입하고, 연구 종료 후에도 3년간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반영 실효성을 높인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민·시군·의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연구원이 되기 위해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책브리프 확대 발간과 정책라운드 포럼 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를 상시화한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플랫폼은 인프라 위에서 AI 모델을 관리하고, 실제 업무에 맞게 최적화하는 역할이다. 삼성SDS가 자체 개발한 '패브릭스(FabriX)'는 보안 및 거버넌스를 강화한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I를 제작 및 사용할 수 있다.

솔루션은 최종적인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기업용 업무 솔루션 '브리티 워크스(Brity Works)'와 AI 에이전트인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통해 회의록 자동 작성, 실시간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김 부사장은 "삼성SDS는 AI 플랫폼을 보유해 컨설팅부터 구축 및 운영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다"며 "135개사 이상, 58만 명의 고객이 AI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의 기술력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AX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후, 이동수 네이버 전무는 "에이전트 AI가 수능 문제를 풀고 몇 점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무는 "에이전트 AI가 사용자 대신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 직접 구매한 것보다 비용을 어느 정도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28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정동영의원실>

기업용 AI 플랫폼 '패브릭스' 소개 현대차 "로봇·반도체 4차 산업 기술 기반 제조 지능화 시급" "中 테크기업車 진출로 경쟁 격화"

'절감'했는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사람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AI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제한 조현철 현대자동차 상

무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글로벌 로봇 전략을 예시로 들며, "통신 및 반도체, 디지털 트윈, 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제조의 '지능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상무는 "기술이 외교, 안보 및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가 도래했다"며 "혁신적인 기술로 더 뛰어난 품질을 구현하고,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전 및 IT 테크 기업 샤오미의 SU7, 통신 및 IT 테크 기업 화웨이의 아이토 M9(Aito M9)을 예시로 들며, 테크 업체의 자동차 시장 진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제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발제 후, 박윤규 NIPA 원장은 "정부는 피지컬 AI에 2조 원, 에이전트 AI에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로봇을 제작·생산·운영하는 피지컬 AI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크팩토리를 우리의 기술로 구축해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원장은 "에이전트 AI의 생태계부터 플랫폼까지 꼼꼼히 살펴 정부와 공공기관에 에이전트 AI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한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 김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비례대표)도 "AI 플랫폼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국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며 발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6월서 9월로 옮긴다

국악의 날 9월 29일 변경 추진 악학계법 편찬일 기준 명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해결을 위해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6월 5일은 국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민속악과 정악을 포괄하는 국악 전반의 상징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날짜가 '환경의 날'이자 '국제 환경의 날'로 이미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어 기념일 중복으로 인한 상징성 약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국악의 날 개별 작품이 아닌, 국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립한 역사적 기준을 토대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악학계법(樂學軌範)』의 의미를 강조했다. 『악학계법』은 조선 성종 24년(1493년)에 편찬된 국가 차원의 종합 음악서로, 조선시대 음악 이론과 연주 체계를 집대성하며 정



윤준병 의원

악은 물론 민속악까지 아우른 국악 체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특정곡의 기록에 근거한 '여민락'과 달리, 우리나라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국악의 날로서 보다 폭넓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악학계법』 편찬일인 1493년 8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악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담았다.

또한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학술행사·경연대회·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집약된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그 상징일 역시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역사적 기준 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며 "국악의 날 변경을 계기로 국악 진흥 정책과 국악문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인권교육이 양성과정 신규 교육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천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교육 양성과정'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인권에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인권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양성과정은 기초과정-심화과정-보수과정의 3단계로 구성되며, 총 12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첫 단계인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전반의 각론까지 다루는 과정으로, 3월 12일부터 매주 1회(목요일)씩 총 5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

로 운영되는 심화과정은 사회복지와 인권, 국제인권협약 등 권리주체별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보다 심화된 학습을 제공하며, 5월부터 운영된다.

이어 심화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과정은 사례·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프로그램 기획, 강의 시연, 전문가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7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김미숙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교육이 양성과정을 통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통합지원 확대

상담·자기역량강화 등 지원 단계별 회복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청년 최대 200만원 돌봄비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뒤로한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위기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13~39세)을 대상으

로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법률·재무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체 대상자 중 13~34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19~39세)에게는 은둔 정도에 따라 자기이해 상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공동생활가정 등 단계별 회

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점진적인 사회 참여와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의 고립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과 소통 활동을 병행해 가정 단위의 회복 탄력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 기간(2024~2025년) 동안 가족돌봄청년 502명에게 자기돌봄비(10억 400만 원)를 지원했으며, 고립은둔청년 248명에게 회복 프로그램(3억 2,500만 원)을 제공했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

과장은 "가족돌봄과 고립이라는 아픈은 청년 개인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있는 도민은 보건복지부 '청년ON' 누리집(mohw2030.c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063-901-13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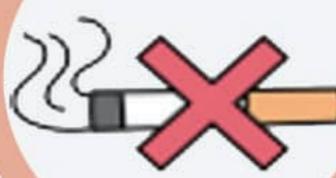
/김은지 기자

다시 확인하셨나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꺼진 불도 다시 보기



**1차량 1소화기
갖기**

전주시 육아환경 정책 대폭 '강화'

2855억 아동복지 예산 편성 보육·돌봄지원·축축한복지↑

전주시가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축축한 복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855억원 아동 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해 한층 강화된 보육과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어린이집 연장 보육(아침, 야간, 24시간) 확대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설 등 양육의 부담은 줄이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올해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1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 확대한다. 기존 3~5세였던 지원 연령이 올해부터는 1~5세까지 확대되며, 특히 1~2세 영아에게 월 3만원의 필요경비를 신규 지원해 보호자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는 올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외국인자녀 보육료는 올해 3월부터 전주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연령별로 월 8만4000원부터 17만원까지다. 단,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시는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24개월~86개월 영유아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에 상관없이 기존 만 8세미만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0.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연장돌봄(오후 7시 30분~12시) 어린이집 102개소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1개소, 주말 및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를 지정·운영한다. 올해부터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연장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호자의 야간 근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 돌봄 인력을 상시 배치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최대 밤 12

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야간연장 돌봄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6억원이 늘어난 135억원을 편성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 육아휴직자 51명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농업기계 이용 경영 부담 줄인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임대료 감면 연장은 농가 농기계 구입 부담과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전 기종으로 모든 임대료 50%가 자동 감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시민안전지킴이 역할' 1등

하루 평균 178건 현장 출동 위급순간마다 시민 옆 '지켜'

전주완산소방서가 2025년 한해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완산소방서 2025년 전북도 전체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총 45,042건 가운데 6514건 활동을 보이며 14.5% 비중을 차지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시민안전구조는 789명 이어지며 위급 순간마다 시민 옆을 지켰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크고 작은 사고 현장 안전에 최우선 현장 중심 대응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주완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7.8건 현장에 출동하며,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활안전 출동 2802건으로 집계됐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 출동 3712건, 생 구조 활동에는 '교통사고 1034건

(27.8%)', '화재현장 904건(24.2%)', '위험 확인 746건(20.0%)' 순으로 확인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별집 제거 1202건(42.8%)', '비화재보 확인 621건(22.1%)', '동물 처리 478건(17.0%)' 순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출동이 대부분이다. 출동 장소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2541건(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로는 8월 846건, 7월과 9월에 출동이 집중돼 여름철 생활안전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토대로 계절별·유형별 위험요인을 세분화해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구조·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태 기자



전북경찰청은 27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 처리 과정을 둘러보는 사례분석 회의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사례분석 회의 개최 재발·보복 방지 방안 마련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27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 처리 과정을 둘러보는 사례분석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례분석 회의에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팀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관리기법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공유하며 빈틈없는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관리기법 재범 위험성 분석, 재발·보복 방지 방안 등이 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례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지역 현안 해결 의정활동 활성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사진)이 2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의정봉사대상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봉사대상은 지방자



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수여한다. 남 의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왔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 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민생을 지키는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역 토양측정 오염도 '기준 이내'

88개 지점 조사결과 양호 수준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에 운영중인 토양측정망 88개 지점에 대한 2025년도 조사결과에서 모든 지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약 2000개, 전북지역에 175개 지점이 운영중이다. 토양측정망조사는 홀수년에 88개소, 짝수년에 87개소를 각각 조사한다. 전북지방환경청 토양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북지역 8개 시·군 토양(88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8종, 일반항목 14종, 토양산도(pH)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했다. 그 결과로 88개 지점 평균 불소 농도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비 19.3%,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항목 7종의 평균 농도는 우려기준 대비 0.8~19.0% 양호한 수준이었고 그 외 6가크롬(Cr6+), 유기인화합물,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4개 항목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국가공인 전문약사 5명 추가 배출

총 8개 분야 전문약사 17명 확보 환자 맞춤형 약료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병원은 '2025년도 제3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추가로 5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약사회가 매년 주관하는 시험이다. 약사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기식 △중환자 중 보 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수여한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전북대병원 약제부 고진영 약사(노인 분야), 이지희 약사(심혈관 분야), 임호영 약사(소아 분야), 차원경 약사(노인 분야), 최은정 약사(중환자 분야)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추가로 5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로써 전북대병원은 총 17명의 국가공인 전문약사를 확보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임지를 다졌다. 특히 이지희 약사(감염·노인·심혈관 분야)와 최은정 약사(감염·노인·중환자 분야)는 3개 분야, 임호영 약사(소아·중환자 분야)는 2개 분야의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해 다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주목받았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내분비·노인·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기식·중환자 등 총 8개의 주요 분야의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환자 맞춤형 약료치료와 약료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베트남에서 'K-내시경' 선진 술기 전파

조진웅 소화기외과센터장 베트남 'Best of HGE' 초청 강연

전주 예수병원 소화기외과센터 조진웅(조진웅, 염소화, 김지오)이 지난 5일 남 베트남 방문해 현지 의료진에게 예수병원 내시경 술기를 전파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의료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조진웅 과장팀은 다낭과 후에(Hue) 지역을 순회하며 학술 교류와 실재적인 기술 전수에 나섰다.

조진웅 센터장은 다낭에서 열린 '환미 ESD 워크숍(Hoan My ESD Workshop)'에 참가해 '위와 식도의 조기암 내시경 치료(Endoscopic treatment of early cancer in stomach and esophagus)'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내시경 시연(Live Demonstration)에서는 인두암 및 위선종 환자 등 세 가지 고난이도 증례에 대해 직접 시술을 선보여 현지 의료진 탄성을 자아냈다. 베트남 후에(Hue)에서 개최된 베트남 최대 규모 소화기학술대회인 'Best of HGE 2025'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센터장은 '제3의 공간 내시경의 임상 진료(Clinical practice of third space endoscopy)'라는 제목으로 최신 고난이도 내시경 치료법을 발표했다. /정소민 기자



해당 발표는 기존 내시경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참석한 베트남 및 해외 소화기 전문의들로부터 큰 관심과 질문 세례를 받았다.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조진웅 센터장은 현재까지 100여명의 소화기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계의 권위자다. 특히, 위장피하종양 내시경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내시경 치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진웅 센터장은 “예수병원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세계와 나누며 국제적인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베트남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예수병원 의료 경쟁력을 국제무대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수출, 전년대비 1.8% 성장세 회복

64억7252만 달러 기록 무역흑자 재진입 무역협회 지원 가속

2025년 전북자치도 수출이 3년만에 회복세로 전환되며 전년 대비 1.8%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025년 12월 동향 및 연간 종합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은 전년 대비 1.8% 성장한 64억7252만 달러 기록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2.9% 감소한 52억9907만 달러로 11억7345만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1년 만에 다시 10억 달러대 흑자 구조

를 회복했다. 12월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5억1786만 달러, 수입은 9.1% 증가한 4억7237만 달러로 454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상위 4개 품목인 농약및 의약품(\$7억7134만 8.6%), 자동차(\$5억3319만 5.9%), 정밀화학원료(\$4억2239만 41.7%), 동제품(4억1013만 42.4%)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5위인 합성수지는 12.5% 감소한 3억9013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 수출은 6.4% 감소한 2억7688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AI 설비 확충 및 중등 화학산업 증설 수요에 힘입어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수출은 25.5% 증가한 1억9183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년만에 첫 10위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권역별로는 아시아(7%), 북미(4%), 중동(17%) 지역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44%), 대양주(-1.8%), 중남미(-12%), 유럽(-10%) 지역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지난 11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미국(\$12억5487만 달러 4.7%), 중국(\$11억4282만달러 12.6%), 베트남(\$4억8556만 달러 13.5%), 일본(\$3억8187만달러 7.9%)이 2025년에도 수출상대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9836만 1.458.2%), 카타르(2,692만 11.3%), 알제리(\$805 191.2%), 사우디아라비아(\$545

만 141.2%) 등 중동국가의 전반적인 고정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 공기조절기및 냉난방기의 중동 수출이 약진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스마트 농업 기반 곡물 생산 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로 쌀인도네시아 농업및의약품 수출도 양호한 성장세(\$8260만 185.5%)를 기록했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장은 "우리 전북 기업들은 주요 수출국 전반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 중동시장 등 신규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과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 본격화

농업인 부담 완화 사업비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2026년 1월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는 관내 10개 지사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면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 대폭 증액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개편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公社は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규모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로 부과되던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근 경기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작년 한 해 농지지일 부문에서 2024년 대비 69% 증가한 823명의 청년후계농에게 농지를 지원했고, 올해 사업비 부문에서

2025년 대비 51% 증가한 3105억원을 확보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 확대를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 차등 폐지 △지원 면적 한도 상향(사업별 최대 0.5ha~1ha 상향)은 형식적제도개선에서 벗어나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된다. 농지은행 포털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해 시·군·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하게 표현되는 항공지도와 지적도, 주변 농지거래정보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정책알림서비스인 「농어촌드림」 SNS(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사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채널도 확대된다. 김동인 본부장은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대폭 증액과 제도 전반의 현실화로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소통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과 안정적 영농화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케이(K)-뒤영벌' 성과 가시화

<속주의 일종>

화분매개 이용 비중 ↑ 시장 규모 200억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배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최근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와 함께 수분이 필요한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상업적 화분매개곤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원에 생산에서 화분매개 안정성은 작과와 품질,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연중 공급 가능한 표준화된 생산·공급 체계와 현장 적용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중 뒤영벌은 비닐온실처럼 공간이 제한된 시설에서도 잘 활동하며, 기온이 낮고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꽃을 찾아 움직일 수 있어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인 착과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1995년부터 뒤영벌 대

량증식 연구를 시작해 연중 실내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2004년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뒤영벌의 국산 보급률은 도입 초기 0% 수준에서 2024년 92%까지 크게 높아졌으며, 현재 18개 업체가 연간 34만 벌무리(봉군)를 생산해 9408헥타르(ha) 규모 시설재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 화분매개곤충 활용 작목의 화분매개 이용 비중은 25.1%에서 39.4%로 늘었고(11→24), 시장 규모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다.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뒤영벌은 현재 16개 시설재배 작물에 안정적으로 공급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생산능력이 30% 이상 높은 계통을 개발해 직무육성 품종으로 등록했으며, 현장 보급을 위한 신품종 보급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뒤영벌의 생산·사육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사육시스템과 스마트 벌통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농촌진흥청은 뒤영벌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등으로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확대하고 있다. 감지기(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사육시스템은 사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상품성 벌무리 비율을 15% 높였으며, 12개 생산업체에 보급됐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벌통은 활동량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상태 진단과 교체 시점 판단을 지원하며, 실제 적용 결과 활동량 1.6배 증가가 확인됐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농업 현장 의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 영농활동 유지에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26년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자녀의 사고·질병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는 도시에 비해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아픈 자녀를 맡길 곳이 제한적이라 농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사항이다. 또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군산권역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설명회

입주기업 대표들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채널센터에서 군산권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전북대새만금캠퍼스·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대안생 및 일반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안내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의 중소기업기술유통·침해위험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더불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현장상담을 통한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됐다. /정소민 기자

설명회에 앞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조달, 인력확보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경영여로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기존에 참여했던 정부 창업·R&D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오늘 설명회와 간담회는 우리부 지원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는 의견들은 향후 지원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신협 전북본부 '2025년 신협중앙회장 표창' 전달

사업활성화부문 5명 신협발전기여 7명에 시상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2025년 신협중앙회장 표창 전달식'을 진행했다. 중앙회장 표창은 신협중앙회가 조합 임직원에게 수여하며 신협발전에 기여하거나, 사업활성화에 공헌한 직원의 공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북신협에서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받은 직원은 사업활성화부문 5명, 신협발전기여 7명 총 12명이다. 사업활성화 부문에서 전주호성신협

강석권 차장(농·소형조합 성장성·안정성), 전평신협 신해진 대리(신협 어부바 멘토링 우수), 진안군청신협 김중규 과장(체크카드 활성화 우수), 군산중앙신협 전현정 전무(홍보사업활성화), 인후신협 조한비 서기(리온브랜치 채널 운영 우수)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협발전기여 부문에서는 황등신협 강희서 부장, 노송신협 정진안 차장, 전주파타마신협 최다은 사원, 익산신협 윤재상 과장, 전주계인택시 유종진 전무, 직장신협발전 분야에 진안군청신협 양철승 이사장, 농·소형조합 부문에 무주반딧불신협 지대신 이사장이 수상



해 12명의 조합 임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 민관 거버넌스로 실현

제3기 교육거버넌스 위원회 개최... 2026년 주요 정책의제 건의

전북도교육청은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위원장 조정현)'를 28일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 역할을 공고히 하고, 2026년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ESG △인성회복 △지역사회협력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실효성 있는 전북교육 정책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기 출범 이후 각 분과는 분야별 특성을 살린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했다. ESG 분과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성회복 분과는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및 청소년 자치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전북형 인성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지역사회협력 분과는 지역별 지자체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사회 연계 교육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정현 위원장은 "교육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이 제시한 10대 핵심과제가 현



전북도교육청은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

장의 살아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남원교육지원청, 2026 교육계획 설명회 성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남원교육' 비전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남원수학체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남원교육계획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남원교육지원청 핵심과제와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사업 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남원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교육과정 담당 교사, 희망 학부모, 직속기관 팀장급 이상 관계자, 교육전문직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학생수련원장,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남원영아체험학습센터장 등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순서로는 2026 새롭게 달리는 전북교육의 핵심 정책 내용, 남원 교육가족합창단 특별 공연, 2026년 남원 주요업무계획 안내,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남원교육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도 남원교육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영수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남원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교육청, 유·초·특수교사 신규임용 합격자 발표

유치원 57명·초등학교 54명 등 총 111명

전북도교육청은 28일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총 111명으로, 분야별로는 유치원 57명(일반 56명·장애 1명), 초등학교 54명(일반 53명·장애 1명), 특수유치원 5명(일반), 특수초등 1명(일반)이다.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28일 오전 10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b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신규임용시험은 2차 시험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제1차 시험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평가로,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으로 진행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 별도로 실시됐다.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월 중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분야별 연수기간과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8일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 이날 인권센터는 워크숍을 통해 인권센터 운영 현황 점검과 발전 방향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김명태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생명 존중 특강 성료

10일 간 초등학생 40명 대상 독서교실 운영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전주 및 완주 지역 초등학생 3~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독서교실은 '내일도 행복한 동물'을 주제로, 독서·토론, 특강을 통해 동물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동물권 △반려동물 △멸종 △공존 등의 주제의 수업 활용도서를 사전에 읽고, 독서교실에서 의견 발표 및 토론을 나눔으로써 깊이 있는 수업을 경험했다. 특히, 개강일에는 국립공원이생생물보전원 수의사를 초청해 '사라져가는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주제 아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특

강을 운영했다. 멸종의 원인, 멸종된 동물, 멸종을 막으려는 노력에 대해 배웠으며, 스마트 기기로 동물권 관련 퀴즈를 풀며 동물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현규 관장은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토론과 체험으로 확장되는 참여형 독서 활동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립군산대 '인권센터 발전' 워크숍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 이날 인권센터는 워크숍을 통해 인권센터 운영 현황 점검과 발전 방향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센터 운영 현황 공유, 대학 내 인권 이슈 및 과제 논의, 향후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더불어 인권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학생 참여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 권양섭 인권센터장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태 기자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야외활동은 자제해 주세요.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등 취약계층은 더욱 유의 하세요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요.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서행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 하세요

군산시, 오는 2월까지 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 추진

군산시가 동절기 한파로부터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결 예방을 위해 오는 2월까지 '동파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 전단을 제작, 읍면동 주민센터와 수도검침원 등을 통해 가정·회사·기타 사업체에 배포를 완료했다.

또한 계량기 보온상태 등 관리 상태 점검도 꾸준히 하는 한편,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마을방송'을 신속하게 운영해 동파 방지 예방에 적극 대응중이다.

이외에도 수도관 동파 발생 대비 긴급처리상황반 운영, 동파 계량기 신속 교체, 수도관 동파나 누수지 긴급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 수도과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강하하거나 보온을 해도 동파 위험이 있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서 수도물이 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혹시 수도계량기 또는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는 게 좋다.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을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파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치매 예방 플랫폼 '인지케어' 본격 운영

군산시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치매 예방과 인지 건강을 위한 모바일 앱 '인지케어'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 및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증가와 시대에 맞는 치매 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인지케어' 앱에 가입하면 치매 예방 콘텐츠와 치매 관리 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 온라인 치매 검사 △ 일기 쓰기 △ 문제 풀이부터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 약 복용 알림 △ 걸음 수 측정 △ 마음 인지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마음·인지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 시와 음성 대화로 상호교환 소통도 가능하다.

아울러 센터는 이번에도 도입한 앱의 인지 저하 위험요인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별 연락·대면상담까지 연계함으로써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인지케어 앱은 시공간간의 제한을 넘어 치매 예방에 선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 자신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앱 가입을 독려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대한노인회 시지회 증축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읍시가 사무 공간과 프로그램실을 증축하는 공사를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무 공간과 프로그램실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그동안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일자리 사업, 노인대학 및 시니어 공동 작업장 운영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용 인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간 제약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어 노인 여가 복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의 지도와 삶이 바뀐다”

도시성장·안전·주거 교통 4대 핵심 분야 행정력 결집

익산시가 올해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건설 행정을 펼친다.

최영철 익산시 건설국장(사진)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도시성장 동력 마련 △재난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26 건설 행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는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중장기 설계도를 다시 짤다. 오는 10월 재정비 계획안 작성을 시작하며,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해 '10년 후 익산'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할 전망이다.

시는 또 호남 철도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 익산역 일대가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복합개발을 통해 호남권 교통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문가·관계기관과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기후 위기 대응 방재 인프라 구축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여름 우기철 수해를 입은 산복천 일대



에는 국비 321억 원 등 334억 원이 투입돼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 여름 장마철 이전 80% 공정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조천, 연화천 등 4개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1,773억 원을 투입해 집중 호우와 반복 피해에 대비한 항구 복구에 나선다. 익산시가 자랑하는 주거 안정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돕는 핵심축이다.

시는 총 47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주택 구입과 전세 모두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올해 자

율주행 유상운송 플랫폼 설치공사와 시험 운행을 병행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193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스마트관제센터, 도로 인프라, 전용 차량 제작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영철 익산시 건설국장은 "현장 중심의 건설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연말정산 세액공제답례품 네이버페이 포인트까지

군산시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월 한 달간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군산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증정하며, 당첨자는 3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최대 3만 원) 혜택을 추가적인 경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고향사랑음 또는 KB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앱을 통해 기부하면 된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20만 원 초



과분은 16.5%)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답례품은 고기, 쌀, 단팻빵, 박대, 꽃게장, 전통주 등 27개 품목의 특산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청사, 시민 거실로 '활짝'

전면광장·다목적홀 등 최종 마무리 앞뒤

익산시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익산시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신청사 건립 2단계 공사의 주요 공정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 중 시민 편의 공간을 전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사 건립의 핵심은 시민이 체

감하는 공간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전면 광장과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등 소문과 문화를 위한 공간을 대폭 구축했다. 이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장한 결과물이다.

특히 주변 고질적인 통행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시야를 가리던 전선을 깔끔히 정리하고,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병행해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특히 지하주차장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숲 사업과 연계한 조경 공사를 진행해 청사 일대를 도심 속 녹색 휴식처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진다. 청사 내 부설로 조성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공간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선사한다. 익산시청의 첫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향후 공공 보육의 질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정읍시가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주거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이다. 정읍으로 전

입한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등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마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자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세부적인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2026 관광 유튜브 공모전 개최

세계적 담은 관광 영상 발굴

정읍의 관광자원과 일상적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정읍시가 '2026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의 세계적 매력을 전 국민의 다양한 시선으로 발굴·확산하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통해 관광 인지도를 높이며 전국 단위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응모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별 구분을 없애고 창의성·작품성·활용성 중심의 통합 공모·시상 체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부문 접수 미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관광 홍보에 활용 가능한 영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정읍의 세계적 중 2개 계열 이상을 담은 자유 주제'로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정읍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 전체 분량의 80% 이상 포함돼야 하며 3분 이내 영상 또는 숏폼 콘텐츠도 출품할 수 있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이메일 (rladow163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여행자의 시선으로 정읍을 새롭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상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 정읍의 매력을 전국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온누리상품권 할인 등 혜택

군산시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촌동 '군산디오션시티'와 수송동 '군산수송' 등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2026년 들어 첫 실시된 것으로 새롭게 골목형상점가에 합류한 △군산디오션시티 골목형상점가 △군산수송 골목형상점가는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구역들은 군산 내 인구가 밀집된 대표 상권인 만큼,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최대 10% 할인)을 전통시장 외에 집 앞 골목상권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는 등 민생 경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6년 1월 15일 기준, 기존에 지정된 14개소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465개로 성업중이다.

군산시는 시의 적극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중소 가공업체 '포장재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농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특산물 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공식품 유통에 필수적인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 실적이 1년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축산물이나 임산물만을 단순히 1차 가공하는 업체, 유사한 보조사업을 통해 이미 포장재를 지원받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정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검정고시 대비 '학교 밖 교실' 운영

익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6년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학교 밖 교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밖 교실'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검정고시에 대비해 영어·수학·한국사·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다음달 9일부터 운영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을 비롯해 품드림 청소년단, 청년동아리 'AXIOM'과 연계한 품드림 멘토단 활

동, 문화활동, 자기계발, 또래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도 확대된다.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원과 지원을 전하는 '수능지원 마음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수학여행과 학교 밖 운동회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황윤석도서관 '인기폭발'

건축미+모두에게 열린공간 추구 주말 일 평균 1500명선 방문

인구 5만명의 작은 소도시에 들어선 공공도서관이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유명세에 더해 기존 도서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난 모두에게 열린공간을 추구하는 고창황윤석도서관이 개관 2개월차를 맞고 있다.



28일 고창황윤석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25일) 이용자가 1782명, 토요일(24일)에는 1403명으로 유명 맛집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이면 도서관 주차장과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도서관을 찾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의 최고 인기 비결로는 아름다운 건축미가 꼽힌다. 도서관을 설계한 유현준 건축가는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재해석한 목구조로 만들었다. 내부에는 지식의 산을 쌓아 올린 듯한 현대적 감각의 북마운틴 서가를 배치해 책

을 찾아 읽는 즐거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철각', '철각', 곳곳에서 웃음과 서터음이 터진다. 한쪽에서는 책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탐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스듬히 앉아 만화책과 잡지를 읽는다. 공부하는 학생들, 신기한 듯 둘러보는 등산복 차림의 관광객과 인근지역 주민들. 생소한 풍경이자 이제껏 본 적 없는 장소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다. 열람실부터 따로 없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김제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로 지원

청년 '스펙 비용' 부담↓ 1인당 10만원 한도 지원

김제시는 관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제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어학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해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8세~39세/1986.1.1.~2007.12.31.)으로 어학 및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2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에는 토익, 토플 등 주요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등이 포함된다. *운전면허시험 제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험 응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성장전략실(☎540-2935)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wjdgkh2501@korea.kr)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금은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며, 시험 응시 후 빠른 신청을 권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응시료 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김제에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 등 총 10개 사업 추진

부안군은 지역 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시설원에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고소득 작목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시설원에 비닐하우스 자재 및 자동개폐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된 비닐하우스의 철재파이프, 축면지주대, 개폐기대와 자동개폐시설 교체를 지원해 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 향상과 재해 예방을 도모하며, 소득품목 육성 지원 사업은 읍·면별 고소득 신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작물과 기후변화 대응 유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시설·장비 및 신기술 장비 기반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지력증진 비료를 지원해 토양 환경 개선과 작물 생육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원에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사

업은 2026년 2월 6일까지, 소득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부안군은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 속에서 시설원에 기반 강화와 소득작목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원예분야 보조사업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부안 원예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지원 대상과 세부 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

금 일부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최대 50백만원을 자녀누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양식업·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

내달 13일까지 신청

부안군(군수 권익환)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2월 13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17개 종목에 걸쳐 사업비 11억여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양식장 현대화에 집중을 위해 고수온과 폭염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며,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제(수차, 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인증부

표 보급,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해 스마트한 양식 환경 조성을 돕는다. 또한 패류·해삼 등 어업자원 회복 및 환경 개선 주력 부안의 주력 수산물인 패류와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삼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망, 종자),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촌계, 단체, 어업인 등이며 사업 신청에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며,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제(수차, 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인증부표 보급,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해 스마트한 양식 환경 조성을 돕는다. 또한 패류·해삼 등 어업자원 회복 및 환경 개선 주력 부안의 주력 수산물인 패류와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삼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망, 종자),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촌계, 단체, 어업인 등이며 사업 신청에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 기간 내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며,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제(수차, 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인증부



김제시, 사회적경제기업 간 직접 소통의 장 마련

김제시는 지난 27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2026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제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중앙부처 및 도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안내했다. 특히, △우선구매 패스타 등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현업근로자 건강관리 '앞장'

24명 대상 건강상담 진행

김제시는 28일 체육진흥과 현업 업무 종사자 24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건강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해 체계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및 간호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상담은 체육진흥과 소속 수영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 청원경찰, 환경 정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업 간호사의 1:1 맞춤형 상담과 함께, △혈압·혈당 간이검사 등 주요 건강지표 측정 △직업적 질환 및 개인 질병에 대한 건강상담 △겨울철 한랭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성주 시장은 "현업 종사자의 건강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2026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고창군은 올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및 백신 공급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28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2026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축산 관련 단체와 고창군 공수의사 등 13명이 참석해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고창군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 강릉, 경기 안성, 포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전남 영광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금봉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이날 현재 38건 발생했고 관내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에 고창군은 축산단체에 종사자 방역관리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고 전염병 사전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은 올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및 백신 공급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동립저수지 통제소 4개소, 종오리농장 통제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하며, 공동방제단 3개반, 농림부 소독차량 6대를 동원해 축사 진출입로와 주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 단위의 자율방역 강화와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축산관계자와 유관기관 모두가 엄중한 방역의식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2단계 도약 준비

김제시는 금구면 선암리 일원에 조성된 선암 자연휴양림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류형 산림휴양시설로의 기능 강화를 위한 2단계(2026~2029)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암 자연휴양림은 지난 2023년 9월 개장 이후 꾸준한 이용 수요를 보이며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숲속의 집 운영시설 6동의 평균 가동률은 64%였으며 주말에는 78%에 달하는 등 도내 자연휴양림(9개 휴양림 중 2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체험·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2단계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설계용역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연차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숙박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운영 수입을 증대시켜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의 핵심 목표다. 시는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수입 기반을 확보하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암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선암 자연휴양림은 지난 2023년 9월 개장 이후 꾸준한 이용 수요를 보이며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숲속의 집 운영시설 6동의 평균 가동률은 64%였으며 주말에는 78%에 달하는 등 도내 자연휴양림(9개 휴양림 중 2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체험·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2단계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산림휴양관 건축공사 설계용역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연차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숙박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운영 수입을 증대시켜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의 핵심 목표다. 시는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수입 기반을 확보하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암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하늘빛 주산회, 부안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주산면 하늘빛 주산회(회장 황희철)는 지난 27일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6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회 행사에서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군민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으며, 하늘빛 주산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하늘빛 주산회는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하늘빛 주산면 문화복지센터에 소속된 법인으로, 주민복지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희철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 시동...입주 공모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 모집 50% 관외 입주자 배정·청년 가점 3-4월 교육·계약·5월 순차 가동



남원시는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남원 미꾸리의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를 오는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축적해 온 미꾸리 실내 양식기술을 기반으로 관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4ha 규모의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 2024년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해당 부지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꾸리 공유양식장 20동을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 최종 준공 예정으로, 2026

년 2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3-4월에는 미꾸리 생태, 양식 현황, 양식기술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4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은 남원시에서 조성한 양식장을 민간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초기 시설투자비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남원으로 전입해 미꾸리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입주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취지에 따라 전체 18동의 임대형 양식장 중 50%를 관외 입주자에게 배정하고, 45세 이하 청년 신청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미꾸리 및 내수면 양식 경력,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가족 동반 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월스톱 지급' 체계 구축

27일까지 지급설계 진행총력 신청-지급 한번에...시간 단축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용 지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월스톱 지급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급되며, 남원시는 설 명절 이전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지급을 완료해 명절 전후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은 신청서 출력, 대상자 확인, 지급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수기 명부 확인이나 별도 기록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가능해, 시민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를 설계해, 고령자나 다자녀 가구 등 개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급 초기 혼잡을 줄이고, 단기간 내 집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타 지자체의 경우 명부 수기 확인 방식으로 인해 지급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어렵고, 중복 확인·사후 기록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남원시가 구축한 지급 프로그램은 지급 즉시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중복 지급이나 누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처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 정해 대형 유통점으로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 속도와 현장 집행력이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표본감시 의료기관 4개소 확대...대응 역량 강화

완주군이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4개소 확대 운영한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유행 양상을 분석하고, 예방·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군은 이번 확대 운영으로 관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근 기자

월세 1만원 남원살이 '귀촌이' KBS2 생생정보서 일상 소개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활동명 '귀촌이')이 주천면으로 귀촌한 지 한 달 만에 KBS2 '생생정보' '나나랜드' 코너에 출연하며 남원 귀촌 정책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알린다.

김범준은 2025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남원시 주거 지원 정책사업 '남원에서 살아볼 가(家)'에 선정돼 현재 주천면에 거주 중으로, 월세 1만 원의 부담 없는 주거 환경 속에서 실제 귀촌인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김범준의 사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방송 촬영은 주천면 하주마을을 배경으로 시골에서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주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마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남원시 삼성스토어 공실시장점 김경찬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경로당에 목·어깨 안마기 2대를 기부했다.

해당 내용은 29일 오후 6시 35분, KBS2 생생정보 '나나랜드' 코너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꽃감 설 직거래장터 개최 고산미소시장서 내달 15일까지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천원주차장에서 제10회 완주꽃감 직거래장터를 개최·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완주감생산자협동조합이 주관하며, 고산면·비봉면·운주면·화산면·동상면·경천면 등 6개 면의 감 재배 농가가 참여한다.

참여 농가들은 직접 생산한 꽃감과 감말랭이, 감시초 등 다양한 감 가공품을 현장에서 선보이고, 산지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완주꽃감의 깊은 단맛과 쫄쫄한 식감, 전통 제조의 정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지난 완주꽃감축제에 이어 직거래장터를 연속 운영함으로써 완주꽃감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춘길 완주감생산자협동조합 대표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최고 품질의 완주꽃감을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소개하고, 설 명절 선물로서 완주꽃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꽃감은 지난 2024년 두레시·고종시가 지리적표시 인산물 제64호로 등록되며 고유한 품질 특성과 전통성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성과를 거뒀다.

/완주=김명근 기자

완주군, 인구도 세수도 늘어...5년 연속 '세입 1조'

지방세 전년 대비 13.6% 증가 2025년도 세입 1조 2,123억 마감 인구 10만·기업유치 성과 '뒷받침'

완주군이 인구 10만 달성과 활발한 기업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5년 연속 '세입 1조 원 시대'를 이어갔다.

27일 완주군은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이 1조 2,123억 원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결산 대비 888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군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 일부

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방세가 158억 원(13.6%) 증가하며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다.

자주채원인 지방세는 1,318억 원, 세외수입은 452억 원이다.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의 증가와 근로소득자 급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59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세입외차율은 결산추경 대비 각각 2.6% 및 2.0% 이내로 관리돼,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달성했다.

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입이 증가한 핵심 요인으로 △

적극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년 유입 및 출산 증가 △주거 안정과 교육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구 10만 달성 등을 꼽았다.

완주군 인구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9만 1,134명에서 매달 증가해 2025년 말 10만 444명(외국인 포함 10만 6,043명)으로 늘었으며, 9,310명이 증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와 세입 증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순창군, 생활위험 직접 신고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안전신문고·음옴통해 신청 안전재난과 검토 후 대상 선정

순창군은 군민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오는 2월부터 지역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군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보하고, 민관이 함께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

물 등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 시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 음·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핸드폰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은 군 안전재난과에서 검토 후 점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정밀 확인하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신청자와 시설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 본격 EBS 콘텐츠·학습코디 코칭 제공

순창군은 28일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모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 6월 공모에 참여해 9월 최종 선정된 이후 센터 조성을 준비해 왔다.

육천인재속 지성관 2층에 조성된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춘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EBS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디의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



순창군은 28일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사진=순창군>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육천인재속 관계자,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전북센터장, 오름에듀테크 및 EBS 관계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밀착 지원과

최적화된 시설을 통해 순창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현재 육천인재속 지성관 2층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말 순창군 어학·진로진학센터가 개원하면 해당 시설로 이전해 운영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설 맞이 지정기부 참여 이벤트 진행

고향사랑음·위기브 통해 응모 청소년 심리치유·길고양이 지원

완주군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의 취지를 알리고, 완주군이 추진 중인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28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음' 또는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완주군 지정기부 사업에 기부한 뒤 답례품 선택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완주=김명근 기자

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

소형중장비 40명·드론 8명 대상 교육비 50% 드론 최대 150만원

순창군이 오는 2월 6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중장비 및 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 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카이드리) 40명, 드론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중장비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신제

사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 과정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50%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며, 농업용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카이드리) 40명, 드론 8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 중장비와 드론은 농사 짓는데 필수 조건이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5억 6천 투입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모색

카드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기사 처우개선 수당·방범등 설치

남원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택시 321대(개인 242대, 법인 79대·6개 업체) 대상 총 5억 6천 2백만원(도비 6천 3백만원, 시비 4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콜관제료 △카드수수료 △스카드통신료 등 택시 운

영 필수적 비용으로, 택시업계의 고정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카드수수료는 전액 지원하고, 콜관제료는 월 4만 원 한도, 카드통신료는 월 5,500원을 정액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월 6만 원 수준의 시정 홍보비를 지원해 택시를 '움직이는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택시 기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 대·폐차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카드수수료는 전액 지원하고, 콜관제료는 월 4만 원 한도, 카드통신료는 월 5,500원을 정액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남원시는 올해 택시 지도·감독 업무를 연중 추진하며, 방범등 설치 지원은 1분기 내 완료하고, 콜관제료·카드수수료·통신료 등 각종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안전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단속 실시

임실군이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오는 2월 6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가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여부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 △영양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임실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확인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해 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한기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150개 경로당 순회

진안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농한기 경로당 감염병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1개 읍·면 15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로당 이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감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및 집단생활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결핵, 호흡기 감염병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손 씻기와 음식물 위생 관리 △결핵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기침 예절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기침 예절 등 주요 예방 수칙을 직접 시연해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 효과를 높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6년 농군사관학교 개강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개강식'을 상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한국농수산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토마토 중급 △토마토 심화 △사과 다중·밀실 3개 과정에 대한 소개와 연간 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교육생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과정 교육 수요를 반영해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하고 기존 심화 과정과 구분해 단계별 교육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수준과 경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26년도 공모사업 대응 준비

공모사업 대응의 체계성·연속성 확대 기반 마련

무주군이 중앙부처·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공모사업 추진 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선정 이후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에 주

력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모 일정 공유, 사전 적정성 검토, 선정 이후 성과 점검을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정보 수집과 기획 기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2026년 공모사업 추진 관리 계획'이 공모사업 대응의 체계성과 연속성 확대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공

모를 통한 안정적인 외부 재원 확보, 군정 주요 현안 및 중장기 발전 과제 추진을 가속할 방침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사업은 군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현안 해결 등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올해는 무주군 여건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말이 아닌 성과” 군정설명회 성료

속도감 있는 행정 다짐

임실군이 지난해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군정 목표와 비전,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전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상황리에 마무리했다.

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9일 임실읍을 시작으로 27일까지 7일간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설명회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병행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속도감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군정 설명회에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어져 온 주요 군정사업과 추진

성과,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예산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사업, 향후 군정 비전을 제시하며 임실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특히, 권역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 호응을 얻었다.

주요 설명사업으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본격 추진중인 섬진강 옥정호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임실N치즈 식품·관광 명소화,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성수산 생태숲 관광개발,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군의 미래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 핵

심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은 같은 기간 관내 농업인 1,25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심민 임실군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연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노고 격려·현장 건의사항 청취

따뜻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기여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한편 현장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훈식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9개소와 노인생활시설 3개소 등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또한 시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장수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위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에 그치지 않고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복지정책 개선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새해를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

눌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나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10년 농촌 미래 그린다

지난 2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임실군은 지난 23일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의 힐링, 특화의 성장, 상생하는 임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배분 및 고도화 △주민공동체 및 자치기반 강화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활성화 △농촌경관 관리 및 관광자원 육성 △농산업 경쟁력 강화



와 생산주체 역량 제고 △스마트·친환경 생산공간 조성 및 환경관리 등 여섯 가지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임실군 전역의 공간 구조 분석 결과와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읍·면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임실군 전역의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군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보완해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으로 놀러오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진안 관광 활성화 본격화

진안군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여행 전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한 뒤, 진안군 내 가맹점에서 소비한 금액을 정산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실질적인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촉

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스마트관광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며, 소비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번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진안군 전체의 관광재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업소 확대와 운영 방식 고도화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하천 관리 정책 전환 촉구

5분 자유발언, 천천면 복개하천 복원 필요성 검토방향 제안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복개하천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하천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천면 송송리 송탄마을을 흐르는 율치천을 예로 들며, “그동안의 하천 관리는 도로 확충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복개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물순환 기능 약화와 침수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하천 복원 추세를 언급하며 장수군에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관내 복개 및 구조 변경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하



고, 단기적 민원 해소보다 중장기적 비용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행정적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은 한민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행정 자산”이라며, “지금 당장의 편익이 아니라 수십 년 후의 환경과 재정을 내다보는 차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제안이 장수군의 하천 관리 방식을 체계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모집...전문 농업인 양성

사과온라인마케팅·포도수박 등 4개 과정은 2월 6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반딧불농업대학' 운영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반딧불농업대학은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는 2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사과와 온온라인마케팅, △포도, △수박 등 4개 과정이 개설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청 인원이 많은 3개는 정규과정으로, 나머지 1개는 지역 특화작목 기술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작목별 재배 기술, △농업 경영, △유통부 제작 기술, △시를 활용한 병해충 진

단 및 실습, △현장 실습 교육 등이며, 농기계 안전 사용 실습 및 농작업 안전 교육은 공통 과정이다.

반딧불농업대학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2월 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전자 우편(muju197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인상담소, 무주군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063-320-2847)나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된 '영농능력향상도조사표'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박차

올해 521동 규모 지원 확대

임실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주택 413동,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68동 등 총 521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총사업비 19억6천만 원으로 국비 9억8천만 원과 군비 9억8천만 원이 투입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금액은 주택당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역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지원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2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흩날리는 석면 가루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슬레이트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임실군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84억여 원을 투입해 총 2,621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심민 군수는 “많은 주민이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거주 이희곤 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 진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새해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부 소식이 전해져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관내 거주하는 이희곤(세원농장)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안읍 지사협 지정 기탁금(소급상고)으로 적립되며, 향후 진안읍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및 긴급 구호비 등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을 전달한 기부자 이희곤 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얻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나눔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진안읍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 공음면 평촌마을 주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공음면은 지난 27일 평촌마을 주민들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평촌마을회(이장 박정수)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후 2026년도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평촌마을 주민 일동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 기탁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예숙 공음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평촌마을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산림조합, 익산시에 성금 총 3,000만원 기탁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전달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이 지역의 녹색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 중 2,000만 원은 민간 부문 나무심기 단체인 '새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1,000만 원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기탁됐다.

성금은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와 숲 조성 사업에 활용되고, 다이로움 나눔공간을 통해 복지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하는 봉사 활동과 복지 지원 연계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을 가꾸는 일과 이웃을 돌보는 일은 모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이 지역의 녹색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NH농협 무주군지부, 임직원 모금 통해 2,400만원 기탁

'고향사랑 무주사랑' 동참

NH농협 무주군지부가 지난 2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천4백만원을 전달하며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탁은 NH농협 무주군지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첫 해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소수는 지부장은 "무주군민과 동고동락한다는 자부심으로 무주 발

전과 군민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NH농협 무주군지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13억 8천8백만 원을 모금해 누적 기금 27억 3천2백만 원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일반 및 지정 기부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4,000,000원 기탁



완주 선덕보육원 아동 5명 필리핀 해외연수 지원

완주군에 소재한 선덕보육원(원장 성제환)이 아동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덕복지재단(이사장 김홍석)이 주최하고 한국 드림문화재단(이사장 엄윤숙)이 주관하며, 지난 27일부터 2월 10일까지(15박 16일) 필리핀 루손섬 팜팡가주 클락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국내 중심의 교육

을 넘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도전과 성장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이 모여 선덕보육원 아동 5명이 첫 해외 연수에 참여하게 됐다.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5명의 아동들은 원어인 영어 1:1 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참여 등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생활개선회, 이웃돕기 성품 기탁

장수군 생활개선회(회장 김윤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떡국 217만원 상당의 성품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연초에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장수군 생활개선회는 1958년 농촌 주거환경과 음식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단체로, 현재 36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윤희 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화물연대본부 정읍지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읍지회가 지난 27일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정읍지회 회원들이 매월 납부한 회비를 통해 조성됐다. 지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지회장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회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정읍 지역 내 더 많은 나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마음을 합쳐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5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화물연대 정읍지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부 활동과 자원봉사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남원 산동면 동남원새마을금고, 백미·이웃돕기성금 기탁

남원시 산동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사랑의 줌どり 운동'을 통해 마련한 백미 500kg과 이웃돕기 성금 7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매년 '사랑의 줌どり 운동'을 전개해 백미와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남원새마을금고 및 줌どり 운동 참여자들은 "추운 겨울을 맞아 나눔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줌どり 운동 참여자들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산동면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겨울철 차량관리 이렇게 하세요. 시동 전 배터리 체크, 부동액과 물비율 (50:50), 연료필터 패킹 체크, 가급적 사이드브레이크는 NO!, 주차시 와이퍼 세워둘 것, 낡은타이어교체, 체인준비.

〈一事一言〉



자임추모공원 사태의 본질은 전북 행정의 실패다

김관춘
주필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끝내 해를 넘기며 장기 미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땅히 지역 안에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가 유가족들의 서울 상경 투쟁으로까지 번진 현실은, 전북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내 부모, 내 형제가 잠든 곳에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직박한 요구를 지역 행정이 외면한 결과가 '상경 투쟁'이라는 비극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을 방기할 때, 시민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사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전북에서만 유독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추모공원 분쟁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비교적 조기에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 문제가 '최대 규모·최장기 미제'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해결하려는 의지, 결단하려는 책임감의 부재 때문이다. "전례가 없다"는 말은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전례는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회피의 구실이 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명백한 불법이 '민사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임추모공원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장사법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상

태다. 무자격 주체가 추모 시설을 점거한 채 유가족의 출입을 막고, 유골을 사실상 볼모로 삼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불법 점거이자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을 놓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행정이 행하는 존재 이유는 사법 판단 이전에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도 행정은 불법 상태를 바로잡고, 공공질서를 회복할 충분한 수단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사법부의 시간표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유가족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 대안 없는 형식적 면담의 반복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 면담에서 행정 책임자들이 내놓은 답은 "법적으로 어렵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대안 없는 만남은 소통이 아니라 면피다.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접촉은 오히려 유가족에게 헛된 기대만 심어주는 잔인한 행정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북 행정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책임 회피 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

날수록 행정은 판단을 유보하고 시간 뒤에 숨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 그 사이 시민의 고통은 누적되고, 문제는 겹잡을 수 없이 커진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바로 그 악순환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소극 행정이 전례로 굳어질 경우의 파장이다.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정인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사법 판단 이전에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도 행정은 불법 상태를 바로잡고, 공공질서를 회복할 충분한 수단과 책무를 지니고 있다.

자임추모공원 사태의 책임은 분명하다. 애초의 인허가 과정과 관리·감독 부실이 오늘의 혼란을 낳았다. 인허가권자인 행정 당국은 그 책임을 인정하고, 도의적·실질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 이상 '사적 분쟁'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무허가 업체의 불법 점거와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모공원을 유족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서울로 향한 유가족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그것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전북 행정을 향한 가장 슬프고도 무거운 경고다.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전북 행정은 '전국 유일의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스스로 확정짓게 될 것이다. 시민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추모 시설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기억과 존엄이 교차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이 공간이 무허가 업체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행정의 무책임 속에 방치된다면, 이는 한 지역의 행정 수준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묻는 문제로 확장된다. 전북 행정이 이 사태를 끝내 바로잡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해결 실패의 기록과 행정 불신이라는 깊은 상처뿐이다.

이제 '검토'의 시간은 끝났다. 필요한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결단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거액의 보상도, 특혜도 아니다. 보고 싶을 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추모의 일상이 회복되는 정상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금전적 갈등이나 사적 분쟁으로 축소하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행정 책임을 가리려는 또 다른 회피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선택이 곧 다른 책임 방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해결 여부에 따라 전북 행정 이 시민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책임의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의 갈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사설

글로벌 자본과 만난 전북, 지역주도성장 새 모델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금융그룹 BNP 파리바와 손을 맞잡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상징적 이벤트다. 산업 육성의 성과가 기술과 의지뿐 아니라 금융의 뒷받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전북이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행정 지원과 글로벌 금융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이 본격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5대 미래 성장동력에 글로벌 금융 역량을 결합하는 데 있다. 신재생에너지, K-컬처 산업 인프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금융산업까지 협력 범위는 폭넓다.

전북도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고 BNP파리바는 사업 전반의 파인싱과 금융 주관을 맡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산업 설계 단계부터 금융이 결합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 BNP파리바는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을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수소 사업에 참여해 온 만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구상이 보다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토대가 마련됐다. ESG와 장기 인프라 투자에 강점을 지닌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는 전북의 에너지 전략에

신뢰도를 더해 준다.

협력의 범위는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AI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금융 자본과 투자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전북 산업 생태계의 질적 도약이 기대된다. 양 기관이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개별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한 점은 선진적 협약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글로벌 금융과 직접 협력해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선도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 의존적 재정 구조를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국제 자본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은 전북도의 정책 역량을 보여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금융 이해도를 갖춘 행정, 투자 친화적 제도 설계, 투명한 사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은 기회인 동시에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북은 산업 구조 고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기업·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 BNP파리바와의 협약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전북의 산업과 인프라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글로벌 금융과의 협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치밀한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협력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파트너십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미래산업에 실질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송광사일주문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문
-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제1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따뜻한 편지 / 박재규

당신이 보낸 편지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물푸레나무가 그려진
10전짜리 우표 한 장도 붙어 있지 않고
보낸 이와 받는 이도 없는
그래서 밤새워 답장을 쓸 필요도 없는
그 편지가

날마다 내게 옵니다
결봉을 여는 순간
잇따라 물들인
지상의 시간들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럴 때면 내게 남은
모국어의 추억들이 얼마나 흥취한지요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당신의 편지는 풀잎 날 없는데
버리지 못하는 지상의 꿈들로
세상 밖을 떠도는 한 사내의
행한 눈빛 하나 있습니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씨꾸', '낙타풀의 사랑' 등을 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우리주민은우리가지킨다” 부안군, 원전 안전 정책 허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부회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가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동맹이 어떻게 동서남북 산맥과 강을 넘어 오늘날의 23개 기초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가 됐는지, 어떤 연대의 뜻을 품고 활동을 펼쳤는지 그 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편집자 주)



■ 오늘부터 우리는 동맹!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하늘을 뒤덮은 먼지구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는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10km 단일구역 체계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까지로 확대·세분화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 보호를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

그러나 관할 행정구역이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을 고뇌에 들게 했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하는 16개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0월 23일 울산 중구청사에 모여 원전 안전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의 시작으로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해 행정부와 국회 면담, 주요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위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3년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100만 주민서명운동

2023년 5월 동맹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발맞춰 초대 회장(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 23개 동맹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30명은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연대 협약을 가졌으며 이어 정책토론회는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여름의 더

134만명 서명 운동·지속적 제도개선 요구·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선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매년 약 25억원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

위를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동맹은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후에도 쉼 틈이 없었다.

2023년 5월부터 7월 두달여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23개 지자체는 동시다발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위해 SNS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해 지자체장, 국회의원, 기초의원 등 총 117명의 동참을 이끌어 전국적인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주민 공감을 원동력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훌쩍 초과해 134만 519명의 주민이 동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동맹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 ‘이제부터 행정협의회가 함께!’

2023년 6월과 7월에는 권역별 단체장 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6월 19일 해운대구청에서는 부산·양산 권역 단체장 회의가, 7월 11일에는 부안군청에서 전라·대전 권역 단체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앞서 다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뿐만 아니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023년 10월 20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 전국에서 모인 동맹 23개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실무진,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속속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을 선언하고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들 대신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행정협의회 회의 초대 임원진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동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을 이어서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초대 임원진이 다시 한번 선출됐다.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원전 인근 주민 보호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동맹은 이날 행정협의회 출범과 본격적인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 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 우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우리가 쟁긴다!

동맹 23개 지자체 134만 519명의 지역 주민은 원전 안전과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에 가까이 동참했다.

아쉽게 직접 동참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소리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것이다.

동맹은 2023년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를 방문하여 134만 519명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2023년 11월 6일에는 마침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부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

어 11월 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 서명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 결실을 맺은 동맹의 노력과 새로운 시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안의 대안법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18개 지자체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전북 부안·고창, 대전 유성, 강원 삼척, 경남 양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5개 시·군·자치구에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해 일부 지자체는 다시 한번 정책 및 입법 공백에 놓이게 됐다.

임기가 다한 동맹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2025년부터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고 공동 부회장으로는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선출됐다.

동맹의 새로운 임원진은 동맹의 기존 사업들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입법 공백에 놓인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동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주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입법안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민들의 안전권과 수용성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한 동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 복지와 보호사업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건의와 더불어 입법공백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세 보충수요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동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동맹 회원 지자체인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동맹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동맹이 국민과 상생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위해 밝힌 주요 사항은 원전관련 법령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하게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견 반영 체계 마련, 사후추연료 영구 처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입법 공백 5개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방안 마련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이다.

[인터뷰] 권익현 부안군수

“23개 지자체와 연대해 원전 안전 체계 바로 세울 것”

권익현(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부안군수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동맹의 부회장, 그리고 올해부터는 회장 지자체로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었다”며 “원전 안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한 134만 519명의 서명부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이며 우리는 그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했다”고 지난 과정을 소회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 끝에 매년 약 25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며 정부 정책의 기준을 바꾸는 성과도 이뤄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정책과 입법 공백 속에 놓여있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앞으로도 23개 지자체와 함께 원전 안전 제도 개선과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연구용 원자로 지원 과제

동맹의 부단한 노력에 답장이 왔다. 지난해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는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는 입법 공백에 놓여있던 동맹 지자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충수요 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을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급한 불은 끈듯하다. 그러나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맹점이 있다.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만 대상이 된 것이다.

동맹 23개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는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단 한 곳 대전 유성구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빠져 있는 탓이다.

전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연대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여태까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아니면 더욱 많은 주민보호 사업과 복지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큰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